

칼럼



장기채 주필

고령화를 실감하는 나라

1960년대 일본이 인구과밀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다마 신도시'는 수도 도쿄 남서쪽에 위치해 있다. 한 때 인구 31만을 목표로 개발된 계획도시지만 지금은 '노인들의 도시'가 돼버렸다.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젊은 인구의 도시 유출 때문이다. 초·중학교가 잇따라 폐교했고 집값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다마시에 따르면 당초 인구는 계획에 크게 못 미치는 14만 7734명 수준이었다. 이 중 24.7%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초고령 도시다. 카네코 류이치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소장은 "아키타현, 시마네현 등의 초고령 도시에서 낫 시간에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은 노인밖에 없다"며 "고령화를 실감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극심한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일본의 근저를 흔들고 있다는 말이다.

급증한 노년층 인구는 노동력 부족과 생산력 저하, 노인부양 문제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유발 시키고 있다.

문제에 대응할 수 있었던 '기회의 시간'을 놓친 일본은 뒤늦게나마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국력을 쏟았다.

이는 출산·고령화가 꼽힐 것이다. 일본인구문제연구소의 분석을 보면 15~64세 생산가능 인구는 1995년을 최고점으로 이미 20년 가까이 감소세가 이어졌다.

2015년에는 생산가능 인구가 1995년 정점 대비 1000만명 이상 줄게 된다. 젊은 층이 대다수를 차지하던 각종 아르바이트 업종들이 채용 난을 겪고 있지만 임금은 크게 개선되지 않아 직원들의 이탈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노인 돌봄 문제도 수면위로 떠올랐다.

요양 관련 종사자수는 2010년 말 현재 약 133만 명으로 10년 사이 2.4배가 늘었지만 여전히 수요 대비 크게 모자라는 실정이다.

노인의 고독사와 각종 노인범죄도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다.

최근 일본 내에서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20년이 넘는 기간동안 계속해서 인구 절벽에 대한 경종이

울렸음에도 잘 대처하지 못했다는 자기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비판을 수렴해 "50년 후 1억 명 정도의 안정적인 인구 구조를 유지 한다."는 문구를 중장기 경제·재정 운영 방침에 명기하기로 했다.

경제·재정 운영의 기본 방침을 인구구조 변화에 초점을 두고 마련했다는 점에서 일본 사회의 큰 변화를 읽을 수 있다.

뒤늦게나마 '시대의 심각성'을 인식했다는 평가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올해로 고령사회에 진입하며, 2026년이면 20.8%가 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의 문제는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출산율 수준과 맞물려 미래사회 전반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노후 소득보장 제도가 미흡하여 노인빈곤문제가

심각하며 노인 자살율도 OECD 국가 중 최고로 높아 노후 삶의 질이 매우 낮은 편이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연금,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장 비용이 급증하고 있으며, 젊은 층의 부양 부담 증가로 인한 세대 간의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러한 인구고령화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자리가 최선의 복지라는 전략 하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고령자 고용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이 채택되고 있다.

더 오래 일하고 더 늦게 은퇴하며, 은퇴 후에도 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활동적 고령화(active aging)'가 핵심 기조라고 한다.

따라서 100세 시대의 도래를 대비하여 우리나라는 고령자 고용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사회 그리고 개인적 차원에서의 공동적 대응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제 늙은이는 노년기를 '여생'으로 생각하며 소극적인 인식을 버리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끊임없이 배우려는 도전과 노력을 해야한다.

이러한 정부, 사회, 개인의 보다 다각적인 대응 노력이 모아져야 한다. 그래야 길어진 노년은 젊은이는 물론 모두에게 진정한 축복받는 사회가 될 것이다.

사설

일부만 받는 통신비 2만원

정부 추경으로 진행되는 통신비 2만원을 만 16~34세와 65세 이상에게만 지급하기로 했다고 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통과됐다.

큰 관심을 받았던 만 13세 이상 전 국민 이동통신비 지원은 결국 만 16~34세, 65세 이상에게 선별지원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만 35세~64세가 빠진 것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 배정된 예산은 5602억원이 줄어들게 됐다.

여야는 통신비 지원 대상 축소로 절감한 재원을 전국민 20%(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 취약계층 105만 명을 대상으로 한 독감 무상 예방접종, 소득 감소 법인 택시 운전자 100만원 지원, 아동특별돌봄비 지원 대상 확충과 확대, 유홍주점·플라텍에 대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 지원 등에 쓰기로 했다.

통신비 지원자체가 국민들의

생각과 동떨어져 있었다. 수십만원이던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통신비 2만원은 가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실제 효과도 굉장히 미미할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하고 세금도 가장 많이 내는 연령대가 이번 통신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민혜제로 이동통신사의 배만 불리는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차라리 태풍과 수해,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계층에 대한 집중지원을 하는게 맞다.

네티즌들은 "소에 불과하다", "나중에 또 세금 부과해서 국민 돈으로 채울텐데 취약계층에 주는게 나을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1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달리 이번 2차는 선별적 방식이라 논란이 없을 수는 없다. 하지만 통신비 2만원 지원은 받는 사람, 못받는 사람 모두 불만이 많다. 과연 이번 지원이 재난지원의 성격에 맞는지 한번더 생각을 해보아야한다.



독자투고

E-mail: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집 지킴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하자

다가오는 이번 추석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 소방관으로 근무하면서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몇 가지 당부하고 싶다.

첫째, 차량운행 시 주의할 점이다. 명절 때면 부주의, 과속, 음주 등으로 안타까운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장시간의 운전으로 인한 피로와 집중력 저하로 인한 사고와 야간에는 자신의 잘못이 아닌 음주운전을 하는 다른 차량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으므로 야간운행 시에는 조심하는 자세를 가져야겠다.

둘째, 벌 쏘임 사고주의이다. 성묘를 하러 갈 때는 자극이 강한 향수나 화장품의 사용은 가급적 피하며 미리 지팡이나 긴 막대 등을 사용해 벌집이 있는지 확인하는 지혜도 가져야겠다. 또한 벌에 쏘였을 때 응급처치법을 숙지하여 만일에 대비해야겠다.

셋째, 음식과 술에 대한 당부이다. 한꺼번에 많은 음식을 먹다 보니 음식으로 인해 배탈이 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또한 무절제한 음주로 싸움이 일어나 즐거운 명절을 망치

는 경우도 자주 일어난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화재 예방이다. 평소시 화재도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듯 추석 명절에도 예외는 아니다. 가스레인지나 아궁이 등에 물이나 음식을 올려놓고 가족이 모두 성묘(省墓)를 가거나 다른 일로 외출을 해 집안에 아무도 없을 때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非一非再)하므로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튀김 등 음식 조리중에는 절대 자리를 비우지 말고 K급 화재 전

용 소화기나 냄비나 프라이팬의 뚜껑을 덮거나 상추나 배추, 양배추 등 잎이 넓은 채소로 산소를 차단하는 게 도움이 된다.

이번 추석에는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주택 화재발생을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을 선물하면 어떨까 생각해 본다.

추석을 앞두고 고향 방문이 자칫 '코로나19'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귀성 자제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 혹여 고향 방문 시 현명하고 절제된 행동으로 사고 없는 추석 명절을 보내기를 바래본다.

한선근/보성119안전센터소방위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기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9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가출인신고 182	▲인광 일코올 상담센터 22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고장신고 12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전기 고장신고 123
▲응급의료센터 139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회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장평 13길 19 (061) 727-3123

서부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풍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